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화이팅!”



국무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새만금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백지화”

윤정훈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지방소멸, 필연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져… 청년 일자리 등 최우선  
국립의전원법 설립 추진 등 박차… 동부권, 전북발전 성장동력으로”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4일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윤정훈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30년 이상 논의돼 온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전혀 없는 ‘지역차별’이자 ‘정치보복’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백지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모범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만금SOC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에 전북자치도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북자치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여·야 협치를 통해 일궈낸 성과”임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은 필연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진다”며 “청년일자리와 주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군과 도, 지역사회와 대학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주여건을 촘촘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청년이 살아 숨쉬고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정훈 의원은 “이전 전라북도의 발전 동력이 새만금 개발 하나에 집중하는 형국이었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부권균형발전과 14개 시·군 전체에

서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면서 “도와 도의회, 동부권 시·군 및 시·군의회가 협업하여 대대적인 인구유입과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더 혁신적이고 더 창의적인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구상하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립의전원법의 본회의 통과와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각종 국내·외 태권도 대회 개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및 관련 단체·시설 집적화, 산악관광자원과 새만금 연계 등 동부권을 전북자치도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RE100은 국내·외 대기업, 유망 중소기업 유치의 선택지가 아닌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고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이 24일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제한 뒤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에너지원별 단기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원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기기 위한 전북자치도만의 대책과 특례 마련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 ‘치료하기전 음식으로 먼저 다스린다’

박용근 자치도의원, ‘식치요법’ 활성화 방안 촉구  
“서양의학에 없는 전통 치유법… 국가적 관심 필요”



예방의학이 중요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해 가는 가운데, 우리 고유의 치유 기술인 식치(食治)요법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아가 식치요법을 한국민의 의료·식문화 콘텐츠로 개발하여 글로벌 농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전북자치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상생과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견인할 것도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24일 제406회 임시회에서 식치(食治)요법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식치(食治)란 약으로 병을 치료하기 전에 음식으로 몸을 먼저 다스린다는 의미로, 15세기 조선조 어의 정순의에 의해 편찬된 ‘의방유취’와 ‘식료찬요’ 등의 의서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박용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식품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사용해 온 식치요법은 서양의학에는 없는 우리 고유

의 치유법으로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우리만의 원천기술로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침술과 한약재 활용 등의 한의학기술에 비해 식치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나 지원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동의보감을 뛰어넘는 동양 최대의 의학사전인 의방유취와 우리나라 최초 식의사이자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찬된 식료찬요 그 가치와 우수성을 제대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및 시장규모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식치와 같은 우리 고유의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치료와 웰니스 식문화 산업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의학의 식치요법적 발굴 △의방유취, 식료찬요의 현대화 및 융복합기술 연구 지원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 △식치요법을 활용한 국가의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재훈 기자

### “도립국악원, 행정운영 쇄신하라”

장연국 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24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립국악원 행정운영 쇄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연국 의원은 “40주년을 앞둔 도립국악원은 소리의 본고장이자 예향의 도시 전북이라는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예술 계승·발전과 국악 저변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 왔다”라면서 이는 “내통령 표창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실력있는 단원들이 전문예술인으로서 아낌없이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최근 도립국악원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니 이러한 노력이 덜거풀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도립국악원 행정운영은 원칙도 기준도 없이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립국악원은 채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채용공고문의 오류와 부실이 너무 쉽게 발견되었고,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정원을 넘어 인력을 운영하면서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아 내부 갈등은 물론 신뢰와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행정을 해왔다는 것이다. /김재훈 기자

또한, 장 의원은 5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인 실장 채용 인사를 제외하고는 정액하지 않으나 채용 절차를 수차례 반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넘어 정실인사 채용 의욕까지 생각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도립국악원장 개방형 공모가 재공모에 들어가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장연국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파견서기관을 원장으로 임명해 도립국악원을 운영했다”라면서 “행정전문가인 서기관의 행정운영 부실은 결국 전북도의 책임”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전문예술인의 처우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용된 6명의 비상임단원의 월급은 약 120만원으로 전북 생활임금 월 24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남 도립국악단 비상임단원 보수 수준이 월 227만원이라는 것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민들의 투표 통한 직접선택 받겠다”

신원식 예비후보, 민주당 탈당… 새로운미래 등 신당 참여 여부에는 “검토중”

전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정부부지사 지냈던 신원식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갑)가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당의 선택이 아닌, 유권자인 전주시민들의 투표를 통한 직접선택을 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 예비후보는 2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탈당은) 그간 주장해 왔던 ‘시민주권의 회복’을 위한 행동으로, 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만 하면 본선에서 무난히 당선되



는 무경쟁 정치 풍토의 개혁을 실천하고자 함”이라고 했다.  
“2023년 7월 19일 당 혁신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당의 제22대 총선후보 선출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신 후보의 혁신제안 요지는 현행 ‘권리당원 비중 50%+일반여론 비중 50%인 합산 득표율 결정방식을 전북도의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본선 당선으로 연결되는 정치현실에 비취 일 반여론 100% 즉 개방형 경선제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기존의 ‘권리당원 비중 50%+일반여론 비중 50%’로 계산된 합산 득표율 결정방식은 권리당원에게 지나치게 높은 투표비중을 줌으로써 1인1표의 민주주의 평등선거제도에 어긋나며,

전주시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후보선출이 어려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따라서 유권자이고 유권자인 전주시민들이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직접 뽑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나의 정치철학을 실천하고자 민주당 탈당을 결심했다”고 했다. 이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철학과 맞다면 새로운미래 등 어느 곳도 선택이 가능하다”며 현재 검토중이라고 했다.  
신원식 예비후보는 끝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사전에 상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 나은 정치를 위한 결단이라는 취지로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 “민주벨트 구축 통해 이낙연 탈당세력 호남 상륙 막겠다”

민주 정동영 예비후보,尹 서천 화재현장 방문에 “정치쇼”  
“야권 압승 이뤄내 현 정권 끌어내리는데 선봉에 설 것”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예비후보(전주병)가 이낙연 탈당세력의 호남 상륙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벨트’를 구축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충남 서천 전통시장에서 화재 참사를 당하고 대통령에게 의원 당한 상인들의 처지와 홀대·무시를 당한 전북도민들의 신세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정 예비후보는 2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서천 전통시장 화재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는 악수 사진만 찍고 떠났다”면서 “경황 없이 허둥대는 상인들에게 대통령이 이래도 되느냐, 정치쇼하는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신에게 대한민국 서천의 존재는 무엇입니까?”라고도 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낙연 탈당세력은 검찰독재를 끝내려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국민의힘 2중대를 자처한 이해 못할 집단”이라면서 “민주주의 성지인 호남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예비후보는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증거를 ‘전과자’라고 비하한 발언은 탈당세력의 전박한 역사인식의

단편을 드러낸 사례라며 민주주의 회복을 가로막는 윤 정권의 2중대 노릇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탈당세력에 발붙이는 세력에게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주 정의구현사제단이 시국미사에서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구속을 외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검찰독재 응징을 원하는 민심”이라며 “전북과 광주, 전남에 파리를 틀러는 이낙연 탈당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주정부 회복의 거센 바람을 수도권으로 북상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끝으로 “호남권을 아우르는 민주세력의 중심축으로서 △야권 분열 노림수에 해기를 받고 △백주 대낮에 암살위기를 겪었던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4월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이뤄내 △경제파탄·민생파탄·외교파탄·남북관계까지 파탄시킨 현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예비후보는 2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전북자치도 성공, 교육혁신에 달려”

한정수 자치도의원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6회 임시회에서 한정수 의원(익산·교육위원회)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법에 담긴 교육특례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한정수 의원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해 도교육청에 비탄대라는 형식으로 3가지 교육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으로 전북특별법(이하 특별법) 제112조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통해 관행으로 굳어진 3월 신학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제안은 전북형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수 의원은 “특정지역에 학생과 인구가 몰리는 문제는 부실한 교육환

경을 넘어 구도심 공멸과 등 도시와 인구 문제”라면서 “흡사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의 축소판”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기존 학교 배정 방식을 탈피하는 자유통학구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학교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통학에 대한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북형 통학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훈 기자